

교육기관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Investigation for Establishing the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 System at Educational Institutions

Soyeon Park^{a1}, Wonhoi Koo^{b2}, Minho Baek^{c*}

^a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ue to the increase in awareness of school safety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t became necessary to improve the capability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at school and to respond to an accident in the case of emergency as well as the awareness of safety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o reinforce safety measures autonomously, and the importance of supports and cooperation from agencies related to the safety of local community is also emphasized. However, it is quite difficult for schools and the Office of Educa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nly with their own capability, and safety accidents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supports from agencies involved in safety of local communities. Therefore, the status and cooperation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levant authorities were reviewed theoretically in this study. In addition, a field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isaster and safety, and cooperation status of officials in charge of practical disaster-related works. Moreover,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a measure to establish the safe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gencies involved in safety of local community in the future based on the findings.

KEYWORDS

School safety
educational institution
Disaster Safety
relevant authorities
status investigation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사고 대처능력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대책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중요성도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및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현황 및 협력 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및 협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안전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안전
교육기관
재난관리
유관기관
실태조사

© 2017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33-540-3134, Fax: +82-33-540-3149, E-mail: bmh@kangwon.ac.kr

1 Tel. 82-10-7232-0092. Email. apf902@naver.com

2 Tel. 82-010-9771-3721. Email. kwh@kangwon.ac.kr

ARTICLE HISTORY

Received Sep. 5, 2017

Revised Sep. 6, 2017

Accepted Sep. 17, 2017

1. 서론

학교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안전 대응능력을 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체험학습 활동 확대 등 교육 정책의 변화로 재난안전사고의 잠재적 발생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 발생 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충격과 시사점을 남겼다. 이는 과거부터 다양한 대형재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전혀 살리지 못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수면위로 떠올렸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1월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항에 여전히 권고사항으로 마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역할이나 협력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대책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중요성도 야기되고 있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교육기관은 소속 단위학교의 재난관리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하며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안전 관련 자원 및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 체계, 유관기관 현황 및 협력현황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실질적으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 기관(유관기관)의 협력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역의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련 부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에서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다.

2. 교육기관 재난관리 협력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2.1 교육기관 재난관리체계 현황 조사

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으로 좁게는 학교를 이르며 넓게는 교육 행정기관도 포함한다. 교육기관은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곳도 있고, 민간에서 설립하는 사설기관도 있다. 정부는 학교안전을 위해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였다. 이 안전교육 표준안은 학교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아에서 고교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교육기관의 7대 안전 중 재난관리 관련 법·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재난관리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인 교육부, 교육청 지방교육청, 학교 등 기관별로 조직도를 마련하여 각자의 역할 및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대규모의 재난으로 학교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에 설치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교육부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는 교육부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상황에 따라 교육청 및 대학 등과 협의하여 학교 휴업 또는 휴교 등의 조치 강구하여 시행한다.

8)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관리, 직업안전, 응급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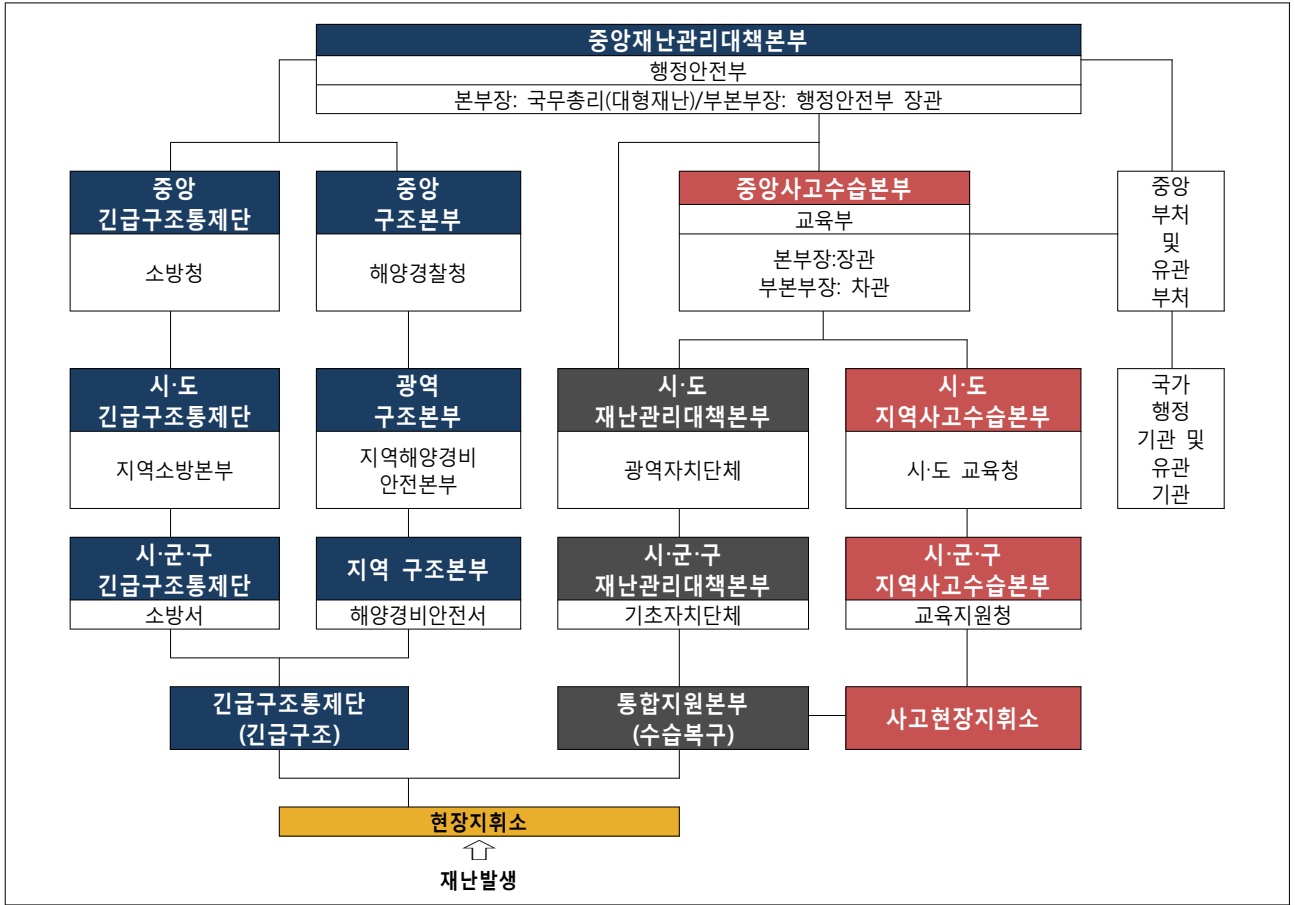


Fig 1. Disaster response system

2.2 교육기관의 재난관리 유관기관 현황 조사

교육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이 있으며 구호 지원 기관 및 기타 재난관리 책임기관(교통 관련, 통신 관련, 전기 관련, 가스 관련, 기타)이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관기관은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이며 각 기관의 현황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소방서는 소방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일선행정기관으로 화재 예방·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등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평시에는 화재 관련된 교육, 훈련, 점검 등 예방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구조, 화재 진압, 구급 활동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서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생 및 교직원 구조 및 지원,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응급 치료 등 인명 최소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서는 일선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 관내 치안유지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하여 형상수사·방법·순찰·교통 질서 확보 등을 수행한다. 평상 시 관내 재난지역 경비 및 방법 현황, 교통 통제 및 안전지대 대피 및 구조·구난 활동 지원 및 파악 업무를 실시하며, 재난 발생 시 경찰서는 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 재난지역에 대한 현장통제,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소는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평상시 긴급 의료지원 준비 및 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사상자 및 부상자의 응급의료,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3 교육기관과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협력 현황 조사

교육기관과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인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016)을 살펴보면 일부 교육기관은 학교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다. MOU의 주요 내용에는 안전 교육 시 강사 파견·지원, 시설 이용·지원, 도구 이용·지원, 자료(정보)제공, 이벤트 활동 등이 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기관은 총 17개 행정도시 중 16개이며, 7개의 교육기관(44%)이 3개 이하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다. 교육기관은 학교 안전교육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학교급 별로 51차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할 시에는 주로 소방서(52.3%), 경찰서(37.6%), 보건소(14.6%)등의 기관 순으로 활용하고 있다.⁹⁾

또한 각 행정도시의 교육청은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소방서,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권고되어 있다. 시·도 수준의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청은 17개 중 15개의 청(88%)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자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이 1년에 1회~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기관과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협력 및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의 민·관·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주변과 등·하교 안전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유관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실제로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협력 현황,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3. 교육기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3.1 실태조사 개요

본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17개의 행정도시 중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총 5개의 행정도시의 시·도 교육청의 재난업무 담당자로 설정하였다. 시·도교육청의 재난업무 담당자에게는 인터뷰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은 국내 관련 법규와 규정, 2016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문항을 알아보았다. 세부적인 개요 및 조사내용은 Table 1와 같다.

Table 1. Survey overview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17년 7월~8월		
조사 대상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5개의 행정도시의 시·도 교육청		
조사 방법	담당자 인터뷰 및 자료 조사		
조사 내용	- 교육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 매뉴얼, 계획서, 교육 및 훈련 계획 등 현황 요청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대응에 따른 애로사항 - 교육기관과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협력 현황 - 교육기관과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애로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 그 밖의 자유로운 의견		
인터뷰 사진			

9)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부, 2016.2

3.2 실태조사 결과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총 5개의 행정도시 시·도 교육청, 유관기관의 재난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교육기관 내 재난관리 팀으로 구성된 경우와, 과로 구성된 경우가 있었다. 각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련 담당 인원 및 조직구성이 달랐다.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 매뉴얼 계획서,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여부에 대한 문의에는 5개의 교육기관은 모두 자체적인 재난 매뉴얼과 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예로 원전지역 인근의 학교에서는 정규 안전교육 외에도 방사능 훈련과 화학물질 사고 훈련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풍수해가 자주 나는 지역의 경우 태풍(집중호우)와 지진에 관한 도상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매뉴얼의 활용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형식적인 재난 매뉴얼, 계획서 작성으로 실제로 재난이 발생 한다면,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안전 매뉴얼이 재난 유형별로 구축되어 있어 인식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과, 팀이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재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운영 및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재난 안전 업무 담당 인력과 비용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이 없다면,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어려워 자체적으로 인력 조달을 해야 하지만, 교육기관 내에서도 안전 분야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다. 업무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부담이 큰 반면, 업무수행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도 없고, 가산점이나 수당과 같은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기관 내 예방시설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교육기관 스스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협력현황 및 구축에 따른 애로·개선사항에 대해 물었다. 현재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단체들 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없어 형식적인 조직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안전 한국 훈련 시 토론기반훈련을 실시하는 정도이며,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재난이 발생 할 때 어느 부서의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하는지 모르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 개의 소방서가 관할 지역의 모든 교육기관을 지원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재난상황에 대한 교육기관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하여 훈련을 겪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2014년 이후 51차리세 맞는 교육과 훈련 계획은 있으나,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안전을 위한 계획과 실행 간의 갭(gap)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정책이나 절차가 하나만 만들어져도 학교 현장에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정책하달을 하지 않고 실제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답변했다.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상호 간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안전 관련법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각 기관들의 재난관리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해야한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의식이 부족하며 전반적인 안전풍토의 조성 및 안전문화에 대한 분위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다음 Table 2는 교육청별 담당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2. Survey Results

구분	자체 재난관리 현황	자체적인 대응에 있어 애로 및 개선사항	유관기관 협력에 있어 애로 및 개선사항	기타 의견
A 교육청	-청 내 재난안전 관련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관련 담당자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음	-순환보직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함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며 지방교육청 내 예방시설도 부족함 -일반행정(지방자치단체)과 교육행정이 통합된다면 교육기관 재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됨 -교육기관에 맞는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함 -교육지원청까지 장학사나 방재안전직렬을 배치하여 재난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재난 발생시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의 연계체계가 미흡함 -대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풀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함 -상위기관에서 협력체계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필요함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 훈련 필요	-학교 현장에 재난안전전문교사 확보방안 검토 필요 -대학(사범대 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B 교육청	-청 내 재난안전 관련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직 내 실제로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명임	-실제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함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동매뉴얼 등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움 -공무원 조직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부족함. -교육기관의 재난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함	-현장에서 유관기관과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대응에 혼란이 야기됨 -협력 방안은 서면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짐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맞춰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C 교육청	-청 내 안전관련 과로 구성되어 있음 -도지사 및 교육청장이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음 -방재안전직렬 인력 확충 및 활용중임	-교육청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담당자 협력 현황, 행동요령, 유관기관 연락처 등이 작성된 '재난안전관리 365'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등에 보급함 -학교안전관리자의 명확한 활용 필요	-재난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가 미흡함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필요 -실제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음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가 필요함 -재난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 필요 -지역사회의 재난관리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의무화 필요	-재난안전교육을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사회재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필요
D 교육청	-청 내 재난안전 관련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청 내의 자체적인 업무협력이 되지 않음 (부서간의 협력 미흡으로 재난안전업무 분담에 대한 책임회피 발생) -자체적으로 학교시설의 이재민 수용에 대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 -교육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재난안전 전문인력 채용을 언급하였으나 실제 업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재난안전에 대한 조직의 권한 확대 필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 훈련이 필요함 -관련 기관과의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체계 공유가 필요함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를 다져주는 것이 필요함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실시하고 있음
E 교육청	-청 내 재난안전 관련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은 도청이하며 교육청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우 구체적인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이 미흡함 -매뉴얼은 문서상으로 잘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 재난상황에서 활용가능할지에 대한 사항은 의문임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대 필요(중간관리자 등) -교육기관의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화 필요(NDMS와의 연계 가능한 시스템)	-기관별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야 함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인력의 변화가 최소화 되어야 함 (업무의 일원화 및 연속화 필요)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자체적인 전문 인력 확충 필요 (교육지원청에 우선적으로 필요) -자원봉사자, 자율방범대 등 주민조직의 활용이 필요함에 있어 먼저, 의식수준이 개선되어야 함	-최초상황 보고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3.3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 검토

앞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육기관의 재난관리 현황과, 자체적 대응에 따른 애로사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결과를 얻었으며, 그로 인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관 내의 재난 시설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그 밖의 재난관리 조직 구성, 제도 및 훈련 정도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 조직 구성, 매뉴얼 및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은 교육기관의 장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장이 재난안전분야에 대해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재난관리가 잘된 교육기관의 경우 다른 광역 단위의 교육기관과 재난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한다¹⁰⁾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규모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17개의 행정도시 모두 제각각의 안전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 또한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경우 재난안전 전담 인력이 없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전업무를 겸하고 있기도 했다. 이에 각 교육기관에 재난안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재난안전 전담부서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법적 근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교육기관은 지역사회의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소통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기관과 재난대응기관인 소방서의 수에 차이가 있어 교육기관 별로 매칭시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각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많은 법과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신설된 법과 제도에 대한 성과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어 학교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법, 제도의 성과나 결과에 대한 회고 및 그에 따른 보완·개선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교육기관과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현황 및 협력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8개의 행정도시의 시·도 교육기관, 유관기관의 재난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 수준에서 협력을 위한 명확한 체계와 관계를 구축해줘야 한다. 한 개의 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의 모든 교육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소방서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또한 필요하다. 다른 재난관리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했을 시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교육부) 차원에서 중앙의 타 부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체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의 실제적 협력과 협조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한 후, 이를 교육청과 지방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실제적인 협력과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제도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실제로 위원회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학교안전관리 위원회에 안건 제출을 요청해도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단체들 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교육청이 이들 간 의 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기관 내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학교안전에 위해서는 교육기관 내 조직은 구체적이고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재난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이에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경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조 3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련 전담 조직 편성하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안전업무담당자의 역할·기능에 대한 명확한 업무 지침 마련해야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교육을 포함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조치 등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된 법 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정책중점사업인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학교안전 강화방안 연구'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for Preventing a Safety Accident at Schools, February 28, 2017
- Internal material of Education Facility Disaster Association (2016)
- 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National Safety Management Master Plan (2015~2019)
- Ministry of Education, 2017 National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November 2016
-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Disaster Preparation Promotion Plan During Summer, April 2017
- Internal material of Ministry of Education, Reporting and Response System at the time of a Disaster, 2017
-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Disaster Preparation Promotion Plan During Winter, November 2016
- Ministry of Education, Master plan of 2017 『Disaster Response Safe Korea Training』, February 2017
-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Manual per Disaster Type at the Field of School, December 23, 2016
- Ministry of Education, Emergency Response Manual for 「Storm and Flood Disaster」, January 2017
- Ministry of Education, Emergency Response Manual for 「Earthquake Disaster」, March 2017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evelopment of COOP Management Technology for Local Governments in Preparation for Earthquake and Tsunami, August 2017
- Kim taebok, Lee young suk, (2011).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4, NO.4, pp.305-315